<민주당 사회경제정책포럼>

보편주의 복지

2013년 3월 27일.

발제: 신동면 (경희대학교)

1. 한국 복지국가의 실태와 문제

"복지국가의 모습은 그 나라의 역사 문화적, 사회경제적,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적 계급정치의 산물이며,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역사의 형성물이다. 따라서 우리가 어느 모형을 희망의 차원에서 선호하고 그 중 성공적인 제도적 특징을 본받을 수는 있으나, 전체의 틀을 우리식으로 재구성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안병영, 1994)

1) 한국 복지국가의 투입

■ OECD 국가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단위 : %, GDP대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Canada	16.9	16.9	16.8	17.6	19.2	18.6	18.3	18.2
France	30.1	29.8	29.7	29.8	32.1	32.2	32.1	32.1
Germany	27.3	26.1	25.1	25.2	27.8	27.1	26.2	26.3
Japan	18.5	18.4	18.7	19.9	22.4	..	..	..
Korea	6.5	7.4	7.6	8.3	9.4	9.2	9.2	9.3
Netherlands	20.7	21.7	21.1	20.9	23.2	23.5	23.7	24.3
Sweden	29.1	28.4	27.3	27.5	29.8	28.3	27.6	28.2
United Kingdom	20.5	20.3	20.4	21.8	24.1	23.7	23.9	23.9
United States	16.0	16.1	16.3	17.0	19.2	19.9	19.7	19.4
OECD - Total	19.7	19.5	19.2	19.9	22.1	22.0	21.7	21.7

Source: OECDSocialExpenditureStatistics(database)

■ 주요 국가의 분야별 공공사회복지지출 (2005)　　단위: GDP 대비 %

구 분	미국	독일	스웨덴	**한국**	OECD 평균
노령	5.3	11.2	9.6	**1.5**	7.0
유족	0.8	0.4	0.6	**0.2**	0.7
근로무능력자	1.3	1.9	5.6	**0.6**	2.3
보건	7.0	7.7	6.8	**3.2**	6.2
가족	0.6	2.2	3.2	**0.3**	2.0
적극적 노동시장사업	0.1	1.0	1.3	**0.1**	0.6
실업	0.3	1.7	1.2	**0.2**	-
총 공공 사회복지지출	15.9	26.8	29.7	**6.9**	20.6

자료: 2009 OECD 사회통계지표.

○ 한국은 전 분야에서 공공지출수준이 최저 수준임. 잔여적 사업과 보편적 사업 모두에서 최저 수준임.

- 근로무능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대표적 선별주의 사업)는 OECD 평균의 1/4수준임.
- 보편주의 성격을 띠는 가족관련 지출은 OECD 평균의 1/7 수준임

○ 한국은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기준으로 볼 때, 어느 국가를 모델로 삼을 수 있을까?/ 또는 삼아야 할까? (경제적 부담 가능성 ∩ 사회적 수용 가능성 ∩ 정치적 실현 가능성)

■ 주요 국가의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 (2007년 기준)

단위: GDP 대비 %

구분	미국	독일	스웨덴	**한국**	OECD 평균
국민부담률	28.3	36.2	48.2	**28.7**	36.8
조세부담률	21.3	21.9	36.6	**21.1**	26.8

국민부담률 = (조세 + 사회보장기여금)/국내총생산 × 100

조세부담률 = 조세수입액/국내총생산액 × 100

자료: 2009 OECD 사회통계지표.

○ 한국의 조세부담률 2007년의 21.1%는 역대 최고 수준이었음.

○ 2007년 한국의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은 미국과 유사한 수준이나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큰 차이(200% 이상)를 보임.

○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정부 규모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만, 국가복지 확대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보다 중요함.

○ 한국은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에서 어느 나라를 모델로 삼을 수 있을까?/ 또는 삼아야 할까?

– 북구 유럽, 스웨덴의 보편적 복지국가가 모델인가?
→ 스웨덴의 고부담 복지국가 모델은 보편적 복지, 정부에 대한 사회적 신뢰, 완전고용, 연대임금제, 노동자계급 조직화, 사회민주당 장기집권 등을 배경으로 이루어졌음.
→ 그렇다면, 한국은?

○ MB 정부 감세정책으로 2010년 조세부담률 19.3%로 하락함.

- 2008년의 대대적인 감세조치가 없었다고 가정하면, 세제의 누진적 구조로 인해 조세부담률은 조금씩 상승하게 되고(세수의 명목GDP에 대한 탄성치는 대략 1.05 정도 수준임), 현재 수준은 대략 21.5% 정도가 되었을 것임.

○ 복지정책은 재원 제약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그 한도 내에서 단계적·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함.

- 장기적으로 볼 때,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한국의 적정 국민부담률은 OECD 평균 37% 수준, 조세부담률 25% 수준(2007년 수준 대비 4% 상승)의 목표 설정이 타당함(참고로 네덜란드 국민부담률 38%, 조세부담률 25.1%수준임).

■ 사회적 수용가능성

○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의뢰 한국리서치 조사자료(2011년 1월)

-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해 사회적인 지원책을 대폭 늘려줄 경우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더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더할 의향이 없다'는 69.5%였으며 '더 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30.5% 였음.
- 그런데,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예산 배정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은 78.7%에 달함.

OECD 국가에서 임금 근로자의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 현황

	2011 년도			
	총임금 소득 대비 비중 (%)			USD at current PPPs
	합계	소득세	사회보험료	총 임금소득
Canada	22.7	15.5	7.3	37 549
France	28.0	14.3	13.7	41 361
Germany	39.9	19.0	20.9	54 950
Japan	21.0	7.6	13.4	44 738
Korea	12.3	4.3	8.1	43 943
Sweden	24.8	17.8	7.0	42 118
United Kingdom	25.1	15.6	9.5	52 013
United States	22.8	17.2	5.7	46 800
OECD-Total	24.8	14.8	10.0	36 696

Source:TaxingWages:Comparativetables,OECDTaxStatistics(database)

○ 현재의 사회적 수용가능성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를 위한 재원 조달의 최선책은?

2. 복지논쟁: 보편주의 복지에 대한 이해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 보편주의 개념적 논의

– 보편주의(universalism)와 선별주의(selectivism)는 일차적으로 '복지 수혜 대상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임 (복지정책의 대상, 포괄 범위)

– 보편주의는 급여가 사회적 권리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원리라면, 선별주의는 급여가 개인의 욕구에 근거하여 차별적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원리임.

–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 생활 수준'의 보장을 통하여 사회권 실현을 추구하는 배분 원리임. 따라서 사회권은 보편적 복지 수급권을 통해 지지됨.

– 개별적 특수성에 기초하여 수급자를 선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선별주의의 대표적 형태 중 하나는 "가구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여 빈자를 수급자로 선정"하는 잔여주의(residualism) 원리임.

구분	보편주의	잔여주의
할당 원리	- 급여는 사회적 권리로서 모든 사람에게 제공 예: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 급여는 자산조사를 통해 욕구가 있다고 인정된 빈자에게 선별적으로 제공 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공임대주택
가치	- 무차별성(평등), 사회 연대성	- 비용 효과성
장점	- 인간 존엄성과 사회통합을 유지 - 포괄적인 서비스와 예방적 프로그램 - 자산조사의 행정비용 절감	- 지출의 감소 - 가장 욕구가 큰 사람에게 가용자원을 집중하여 대상 효율성을 높임 - 소득재분배를 통한 사회적 갈등 완화
단점	- 개인적 욕구와 경제적 상황(개별성)을 고려하지 못함 - 급여수준이 재정에 따라 불안정하며, 정당 간 경쟁으로 비용부담이 증가	- 수급자의 수치심 - 차상위계층의 보호에 무력 - 근로동기 저하, 의존성 심화, 빈곤문화

○ 엄격한 의미의 보편성 원칙에 바탕을 둔 사회복지제도

- 제도의 적용이 보편적, 포괄적이어서 모두에게 보호 혜택이 돌아 감
- 급여 수준은 수급 대상 모두에게 동등
- 국가의 일반 재정으로 운영
- 최소한의 기초적 욕구를 충족하는 수준

○ 보편주의 개념에 대한 수정

- 2차 대전 이후 영국에서 보편주의는 국민기본선을 쟁취하기 위한 과제로 제기되었고 균등급여가 실시됨.(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사회보장제도 수립의 전제조건: 아동수당, 무상의료, 무상교육)

- 자본주의 황금기에 완전고용이 실현되는 상황에서 잔여주의 정책에 대한 요구가 부차적일 수 있었음.

- 1960년대 보편적 복지가 힘을 잃고 있는 영국과 달리, 스웨덴에서는 대상의 포괄성을 유지한 채 소득비례 급여를 도입하여 보편주의를 정착시킴 (동등급여가 아니며, 사회보험료로 재원을 조달).

– 서구 복지국가에서 모든 시민을 포괄하는 순수한 의미의 보편주의 복지정책은 존재하지 않음(기본소득이 예외적임). 즉, “모든 사람에게 어떠한 조건 없이”라

는 기준을 통해 급여를 제공하지 않으며, 인구학적 조건, 거주조건, 고용조건, 기여조건, 전문가 진단 등의 선별 기준에 따라 수급자를 선정하여 급여를 제공.

■ 보편주의는 복지급여와 사회서비스 제공 원리로서 잔여주의와 대립되는 상대적 원리로 이해되어야 함. 즉, 보편주의는 잔여주의와 구별되는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제공원리임.

○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보완적 관계

- 티트머스는 “보편주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긍정적 차별이 필요하다”고 역설함. 복지국가가 직면한 도전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원을 배분하기 위한 긍정적 차별이 가능한 사회적 기반을 형성하는 것임.

– 사회민주주의 국가의 “보편적 복지국가“에서는 광범위한 인구를 포괄하는 보편주의가 기본적 원리로 작동하면서 선별주의 정책수단이 보완적 역할을 수행함.

– 요컨대, 보편적 복지의 핵심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할당 원리가 동시에 요구됨. 선별주의는 보편주의 원칙 내에서 이루어지는 보완적 분배의 원리(targeting within universalism)로 이해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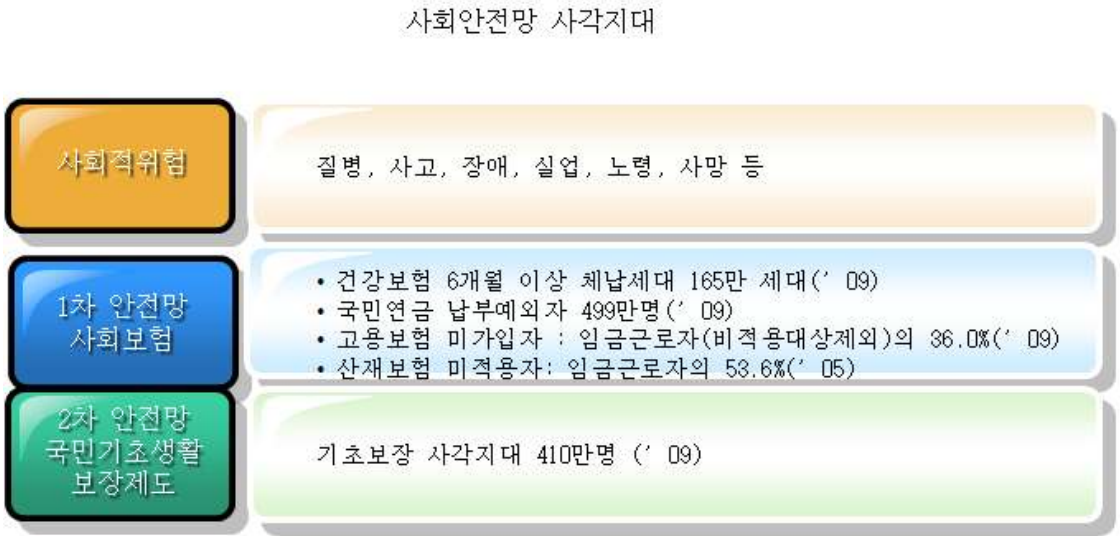
2) 한국의 보편적 복지를 위한 과제

○ 복지 논쟁에서 보편적 복지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임.

○ 보편적 복지를 위한 사회보장의 핵심 과제는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의 네 가지를 꼽을 수 있음.

①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② 보편주의 사회서비스 제공(보육, 교육)
③ 소득보장(실업급여), 의료보장(보장범위와 본인부담)의 영역에서 보장성 제고
④ 보편주의 가족수당 제공(아동수당)

가.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집단이 410만명
- 기초보장제도 개혁: 급여 (수준 및 급여 방식),
수급자 선정 기준(재산환산방식, 최저생계비, 부양의무자)

○ 기초노령연금
- 기초노령연금은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보장제도임. 따라서 보편주의 원리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신축성이 요구됨. 대상자를 선별하고 급여액을 차등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제도의 강화 방안과 함께 논의되어야 함

○ 현행 사회보험제도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보편주의 적용(모든 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법률로 정하고 있으나, 현실은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사회보험의 배제 집단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영세자영업자의 사회보험 배제도 심각한 문제임.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율: 고용보험(48.8%), 국민건강보험(46.8%), 국민연금(44.1%), 산재보험(89.1%)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경우,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는 보편적 복지의 지지 집단이 될 수 있음.
- 사회보험료 지원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비정규직 사용의 유인을 축소시킴

나. 보편적 사회서비스 제공(보육, 교육)

○ 박근혜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는 보편주의에 기초하여 모든 국민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별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선별주의를 결합하는 것이라면 이상적인 발전 방향임.

○ 보편적 사회서비스 제공은 사회복지의 재원부담자와 수혜자를 일치시키는 주요한 수단이 됨. 한국의 계급 구성을 고려하는 경우, 화이트칼라와 조직 노동자들을 보편적 복지 노선을 지지하는 집단으로 세우기 위해서 보편적 사회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보편주의 보육을 위해 무상보육은 중산층에게도 당연히 열려 있어야 함.
- 단,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무상보육의 우선 순위 집단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맞벌이 가정과 전업주부의 차등)
- 0세 아동의 무상보육을 위해 보육비를 지원하기 보다는 부모가 돌볼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며, 직장 여성을 위한 유급휴가를 확대하는 것이 0세 아동 무상보육보다 바람직함.

○ 교육 분야에서 보편적 교육서비스와 선택적 교육복지를 결합하여 함. 전자는 의무·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통해서, 후자는 가구의 필요에 따라 대상별로 제공되는 형태를 띠게 되는데, 교육소외 계층·집단에 대한 지원이나 특수교육 기회확대 등을 포함.

다. 소득보장(실업급여), 의료보장의 영역에서 보장성 제고

○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여야 함.

■실업수당의 소득대체율(2006년)

	미국	독일	스웨덴	**한국**	OECD 평균
%	5.6	33.0	29.3	**6.5**	34.8

실직기간 60개월 이상인 가구의 순 소득 대체율임((실직이전 순가구소득/실직이후 순가구소득)× 100). OECD 자료.

○ 의료보장을 위해 공공의료기관의 강화가 선행되어야 함. 이와 함께, 의료비 통제체계(본인부담금, 민간의료기관 진료행위 통제 수단)를 확립한 바탕 위에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고, 예방적 진료의 급여 및 국고 지원 확대를 통해 의료 보장

성을 강화해야 함.

■ 주요국가의 보건지출(2006년 기준)

단위: GDP 대비 %

구분	미국	독일	스웨덴	**한국**	OECD 평균
공공	7.0	8.1	7.5	**3.5**	6.4
민간	8.3	2.5	1.7	**2.9**	2.6
총계	15.3	10.6	9.2	**6.4**	9.0

라. 보편주의 가족수당 제공(아동수당)

○ 아동의 양육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을 보편주의 아동수당을 도입.

3. 보편주의 복지를 둘러싼 전략적 문제들

1) 무상복지의 문제

○ 보편주의는 '수급자가 누구인가' 즉, 수급자 범위를 나타내는 용어이며, 무상복지와 동의어가 아님.

○ 엄밀하게 말하면, 전 국민 무상복지는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며, 무상이 아니기에 논리적 모순임(무상의료에 대한 비용은 세금 또는 보험료로 충당/ 무상교육은 국민 세금으로 재원을 충당).

○ 무상복지는 급여와 서비스에 대한 수급권을 기여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한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함(사회정책에서 공공부조 수급권자의 수급권을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됨).

○ 무상복지는 복지의 시혜적 성격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며, 복지에 대한 시민의 호혜적 의무와 책임을 경시할 수 있음.

○ 무상복지는 정치 전략적 고려와 함께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함. 무상복지는 필연

적으로 재원 문제를 제기하고 재원 문제는 증세문제와 연결될 수 있음.

2) 증세의 문제

□ 참여정부 말기 2007년 조세부담율 21.1% 였으나, MB 정부에서 조세부담률은 2009년에 19.7%, 2010년 19.3%, 2011년에 19.3% 로 감소하였음.

- MB 정부의 감세와 작은 정부 정책 지향의 기조에서 재정건전성의 문제가 심화

- 2008년 대대적인 감세조치가 없었다면, 세제의 누진적 구조로 인해 조세부담률은 조금씩 상승하게 되고(세수의 명목GDP에 대한 탄성치는 대략 1.05 수준) 현재 수준은 21.5% 정도가 되었을 것임.

- 복지지출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홍보에도 불구하고, MB 정부 복지지출 연평균 증가율 6.2%, 연평균 경상성장률 7.6%: 복지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 장기적으로 증세를 통해 국민부담률 37%(조세부담율 25%선) 맞추는 것이 필요함.

- 세입을 증대시키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증세에서 단계적 전략이 필요. 2017년까지 조세부담률을 정상화 시키고 조세부담률 22% 수준의 목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임.

○ 증세는 세목 신설 없이 감세정책의 철회 등을 통한 세제 정상화와 비과세·감면의 축소,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달성할 수 있음.

- 예정된 소득세, 법인세 감세 계획 철회
- 소득세에서 최상위 구간의 신설 검토
- 종부세 환원 등 재산보유과세 강화
- 비과세·감면의 축소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 포착률 제고
- 소득세, 재산과세 등 직접세 기능을 정상화한 이후 담배·술 등에 대한 소비과세 강화 검토

○ 노령화와 함께 연금 및 보건의료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이에 따라 사회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함. 2007년 GDP 대비 7.6%인 사회보험의 지출수준은 장기적으로 13% 수준에서 관리되어야 하며, 2017년까지 사회보험료를 GDP 대비

9% 선으로 조정하는 목표를 제시할 수 있음.

□ 사회복지 재원을 위한 부유세 세목 신설

○ 부유세는 세제상 다음의 문제를 지님.

- 부의 분배 불평등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 형태는 부동산임. 부동산 보유과세의 강화를 통해 이 문제는 상당한 정도 해결할 수 있음.
- 부유세는 부동산 보유세와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고, 자산평가 등을 위한 행정비용도 큼. 자산의 해외도피 등의 부작용도 있음.
- 현재 부유세를 부과하는 주요 국가는 프랑스, 노르웨이 정도임.

○ 사회복지의 재원 확충 과정에서 '재원부담자' 와 '복지수혜자' 를 확연하게 분리하는 것, 예컨대, '부자가 내라(부유세)' 는 가장 피해야 할 것임 (보편적 복지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공공부문의 최소화와 민간 시장의 확대를 가져올 뿐이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함).

○ 복지를 명목으로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여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과 저항을 유발하는 것은 복지연합의 기반을 오히려 축소시킬 수 있음.

○ 재원 확충을 위해 증세-감세 논쟁보다는 조세정의의 실현을 강조하며, 반칙을 일삼는 특권 집단에게 '제대로 내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 사회적 수용가능성을 높이고 복지연합을 강화할 수 있음.

3) 복지논쟁의 한계에 대한 비판

○ 정치적으로 볼 때, 정치적 전선 형성이 어렵다 : 박근혜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한나라당 70% 복지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대립 구도 전선이 불명확하며, 민주당의 무상복지는 허구적 측면이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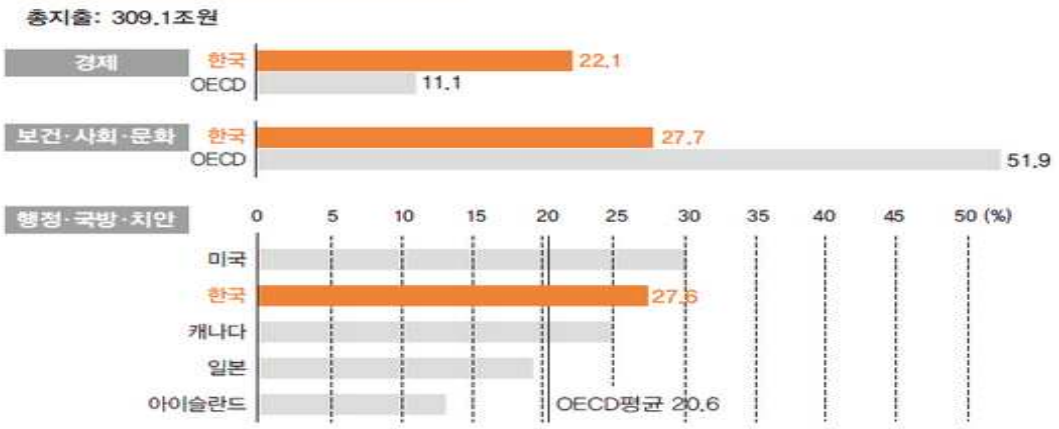
○ 한국 사회의 부정의 문제를 제대로 보고 있는가? 복지보다 정의가 중요하다!

○ 모든 개인이 평등한 인격으로 대우받으며 기회와 번영을 누리는 사회, 즉 정의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복지논쟁에서 담아내야 한다.

○ 복지논쟁에서 정의와 민주주의 문제를 결합하여 전선을 확실히 하여야 함.

한국과 OECD 총지출대비 예산 비중

(단위: %, 한국은 2011년, OECD는 2008년 예산)



부자감세 철회로 인한 연간 세수 증대 규모

자료: 기획재정부

2단계 부자감세 철회시

(2012년 예정된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3조 7천억원

1단계 부자감세 철회시

(이미 시행된 소득세·법인세·종부세 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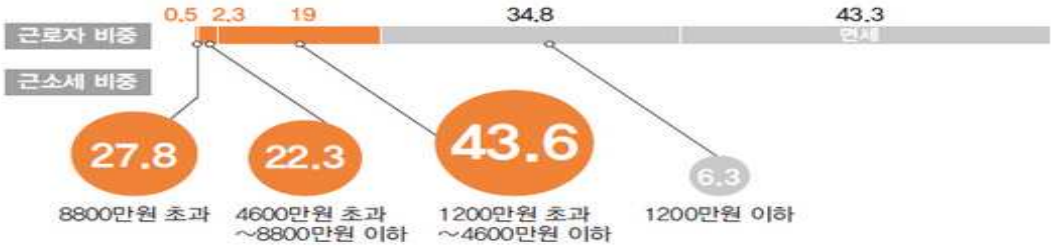
약20조원

복지재원 위해 거론되는 증세방안들

방안	주요 내용	과세 대상	비고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 소득세 과표 1억2000만원 초과구간과 법인세 과표 1000억원 초과구간에 각각 세율 40%와 30% 적용	고소득자, 대기업	•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입법발의안 • 소득세 2조원, 법인세 6조3천억원 증가
부유세	• 순자산 30억원 이상 보유자(상위0.58%)와 순자산 1조원 이상 보유 법인(36개)에 자산의 1~2%를 세금으로 부과	고소득자, 대기업	• 민주당 정동영 의원 주장 • 7조8천억원 세수 확보
사회복지세	• 소득세 400만원 넘는 납부자, 상속증여세·종부세 납부자, 법인세 5억원 이상 납부 대기업에 납부세금의 15~30% 추가 부과	고소득자, 대기업	•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입법발의안 • 15조원 세수 확보
참여적 복지세	•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등 모든 직접세 납부 대상에 부과 • 기존 납부세액의 10~30% 추가 부과	모든 직접세 납부 개인·기업	• 2007년 민주노동당 공약

근로소득세 과표구간별 근로자·세금 비중

(단위: %, 2008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참고> 한겨레신문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의 보편적 복지 추정 비용

※괄호 안은 지자체 합친 금액

항목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무상 급식	• 초중 친환경 무상급식 **1조(2조~2조5000억)**	• 일단계로 초중 친환경 무상급식 **1조(2조~2조5000억)**	• 일단계로 초중 친환경 무상급식 **1조(2조1940억)**
무상 보육	• 만5살 이하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 전액지원 • 만5살 이하 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수당 전액 지원 **4조1000억**	• 공공보육시설 확충 • 유치원비 지원 대폭확대 • 아동수당 **3조**	•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공보육 강화 및 무상보육 **2조8000억**
무상 의료	• 건강보험 보장성 90% 확대 • 병원비 본인부담 상한액 100만 • 간병급여 • 의료 사각지대 해소 • 틀니 • 치석 제거 **8조1000억**	• 건강보험 보장성 90% 확대 • 병원비 본인부담 상한액 100만 • 간병급여 • 의료 사각지대 해소 • 틀니 • 치석 제거 + 서민주치의 제도 • 장기요양 서비스 등 **12조**	• 건강보험 보장성 90% 확대 • 병원비 본인부담 상한액 100만 • 간병급여 • 의료 사각지대 해소 • 틀니 • 치석 제거 + 간병서비스 및 간호인력 확충 • 저소득층 중소사업장 보험료 지원 등 **12조2000억**
대학 등록금	• 저소득 계층, 지방국립대 근로장학금 대폭확충 • ICL (취업후 학자금상환제) 대출금리 3%대 인하 **3조2000억**	• 차상위 계층까지 등록금 반값 등 (구체적 정책 준비 중) **3조**	• 소득에 따라 등록금 면제 또는 반값 • 사학적립금 적정수준 이상 적립금지 • 등록금 후불제 **3조2000억**
보편적 복지 총비용	**16조4000억**	**19조+α**	**19조2000억+α**